

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

-마르크스주의의 자기갱신과 반동화의 위험-

반자반노 이상연

제1절 노동 소멸과 휴만 통합

1. 노동 소멸의 의미

여기서 말하는 “노동 소멸”은 단순한 고용 감소나 특정 직무의 자동화가 아니다.

노동 소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본-노동 관계 자체의 소멸을 가리킨다.

근대 자본주의는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사회형태이다. 자본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해 노동력을 시장에서 구매하고, 노동자는 임금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. 이 관계가 단지 생산 현장에서의 경제적 교환에만 그치지 않고, 교육·복지·정치·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통합의 기본 장치로 기능해 온 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.

그러나 AI·자동화·디지털화가 결합된 오늘의 축적 체제에서, 임금노동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포섭하는 기본 통합 장치가 되기 어렵다.

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이 노동력 투입 확대가 아니라 노동력 대체로 작동하는 순간, “누구나 일자리만 찾으면 생존할 수 있다”는 전제는 구조적으로 봉괴한다. 이때 발생하는 것은 몇 퍼센트의 실업률 상승이 아니라, 임노동 자체가 사회 통합의 중심이 되는 시대의 종언, 즉 노동-자본 관계의 구조적 해체이다.

노동 소멸은 노동이 없어지는 낙관적 해방이 아니라, 기존 질서의 토대가 사라지면서 전체 사회가 불안정으로 추락할 위험이기도 하다. 문제는 이 소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, 어떤 새로운 사회적 기본 관계로 대체할 것인가이다.

2. 자본-노동 관계의 역사성과 한시성

마르크스는 자본-노동 관계를 영원한 질서로 말한 적이 없다. 그는 이 관계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생산관계로 분석했고, 그 내적 모순이 심화되면 다른 관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보았다. 그럼에도 현실의 많은 “마르크스주의자”는 자본-노동 관계를 마치 변하지 않는 중심축처럼 다루며, 모든 변화를 그 축의 주변 변동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.

그러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, 자본-노동 관계의 내부 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이다.

노동시간 단축, 복지 확대, 임금교섭, 고용안정과 같은 전통적 의제는, 여전히 중요한 방어 수단이지만, 더 이상 사회 전체를 안정시키는 장기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. 자본은 임노동에 덜 의존해도 축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·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.

이때 “노동을 지키는 것”만을 목표로 삼는 정치는, 의도와는 달리 소멸하는 관계에 매달리는 방어적 정치가 될 위험이 크다. 노동-자본 관계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면, 그 관계가 더 이상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에서, 우리는 새로운 기본 관계를 사유해야 한다.

3. 휴만 통합: 기존 관계의 대체로서의 새로운 기본 관계

휴만(Humann)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제안되는 개념이다. 휴만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도덕적 화해를 의미하지 않는다. 휴만은 임노동 중심 사회의 붕괴를 전제로, 그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응답이다.

핵심은 다음과 같다.

- 더 이상 모두가 임금노동자로 편입될 수 없다면,
- 사회의 재생산과 통합을 “임금”이 아니라 “지분/소유/참여”를 통해 조직해야 한다.

즉, 휴만 통합은 전통적인 자본-노동 관계 위에 보조적으로 덧붙여지는 장치가 아니라, “노동을 매개로 한 생존”이 아니라 “지분과 통제를 매개로 한 생존”을 기본 질서로 삼는 새로운 사회적 기본 관계이다.

여기서 계급은 “노동자 vs 자본가”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,

- 자본 접근권 0인 사람들(무지분)과
- 자본 접근권과 통제권을 어느 정도 쥔 사람들(유지분) 사이의 구조적 차이로 재구성된다.

휴만 통합은 이 구도 자체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즉, 자본 접근권 0 상태를 구조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혁신 체계,

다시 말해 “모두가 일정한 수준의 지분·배당·의결 참여를 갖는 상태”를 사회의 새로운 기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.

4. 소유-의결-감사 구조로서의 휴만

휴만 통합은 단순히 “모두가 주주가 되자”는 도덕적 구호가 아니다.

소유만 분산시키고 통제가 집중되면, 지배는 형태만 바뀐 채 그대로 유지된다. 따라서 휴만은 다음의 3요소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
1. 분산 소유(지분 접근권의 보편화)

- 국민지분제정, 사회적 잉여의 지분배당, 최소 지분권 보장 등을 통해 “무지분 상태”를 제거한다.

2. 분산 의결(통제권의 사회적 확장)

- 의결권 위임 상한, 위임 분산, 시간지연, 철회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·소수 엘리트에게 통제권이 재집중되는 것을 막는다.

3. 분산 책임(감사·준법·항소·포획방지)

- 공개감사, 이해상충 공시, 집단소송, 징벌적 제재 등을 통해, 지배블록이 구

조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헌정 차원에서 고정한다.

이 구조가 작동할 때, 노동 소멸은 단순히 “일자리가 없어지는 재앙”이 아니라, 임노동을 매개로 한 지배가 해체되고, 소유와 통제가 사회적으로 분산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. 휴만 통합은 바로 이 전환을 가능한 한 봉괴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 조직하려는 시도이다.

제2절 마르크스주의의 자기갱신과 반동화의 위험

1. 변증법적 유물론이 요구하는 것

마르크스주의의 힘은 추상적 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.

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**변증법적 유물론**, 즉

- 현실의 물질적 조건과
 - 그 조건 속에서 운동하는 모순과
 - 그 모순이 낳는 새로운 형식들
- 을 끊임없이 분석하고, 이론을 그에 맞게 **갱신**하는 데 있다.

따라서 자본-노동 관계 역시 “영원한 진리”가 아니라,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서 중심적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**범주**이다. 새 시대에 들어와 현실이 달라졌다면, 이 범주를 재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수정·대체하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요구이다.

2. 노동-자본 관계를 영구 범주로 고정하는 순간

그러나 현실의 많은 마르크스주의 흐름은, 자본-노동 관계를 더 이상 **역사적·가변적 관계**로 보지 않고, 일종의 **출발점 교리**로 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.

AI·자동화·플랫폼·데이터·금융화 등으로 축적 메커니즘이 달라지고, 임금노동이 더 이상 사회 전체를 포섭할 수 없는 조건이 전개되고 있음에도, 이를 여전히 “임시적인 고용 위기” 또는 “정책 실패” 수준으로만 해석하며, 과거의 계급 도식을 유지하려 한다.

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위험을 낳는다.

1. 현실의 새로운 모순(재생산 위기, 무지분-유지분의 분열, 데이터·AI 수익의 편중 등)을 포착하지 못한다.
2. 운동과 조직이 실제로 마주하는 대중의 삶과 괴리되어, **이론이 운동을 이끄는 것**이 아니라 **운동의 발목을 잡는 결과**를 낳는다.

변증법적 유물론이 살아 있다면, 오늘의 자본주의가 **임노동을 통해서**가 아니라, **임노동을 대체하면서도 축적을 이어가는 체제**로 변형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. 이를 보지 못한 채 과거의 범주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순간, 그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비판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뒤처진 이데올로기가 된다.

3. 반동으로의 전락: 관계를 지키느냐, 현실을 보느냐

여기에서 말하는 “반동”은 단지 정치적 옥설이 아니다.

반동이란 역사의 실제 운동에 역행하면서, 낡은 질서를 지키려 드는 태도를 말한다.

노동-자본 관계의 소멸을 직시하지 못하고, 그 관계를 마치 지켜야 할 규범처럼 떠받드는 마르크스주의는, 의도와는 반대로 이미 소멸 과정에 들어선 관계에 대중을 불들어 매는 효과를 낳는다.

이때 “노동을 지키자”는 구호는 “노동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”라는 질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.

그 결과, 마르크스주의는

-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폭로하고
- 새로운 사회 형식을 예고하는 비판 이론이 아니라,
소멸하는 관계를 방어하는 수구 이데올로기로 반동화될 위험이 있다.

4. 휴만과 마르크스주의: 단절이 아니라 시험대

휴만은 마르크스주의의 완전한 부정을 선언하지 않는다. 오히려 휴만은 마르크스주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.

- 마르크스주의가, 자본-노동 관계가 더 이상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닌 조건에서도 여전히 현실의 모순을 분석하고,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는 이론으로 자기 갠신을 할 수 있는가?
- 아니면, 자본-노동 관계라는 과거의 범주에 자기 존재 이유를 걸고, 현실의 변화를 부정하는 교리로 남을 것인가?

휴만은 자본-노동 관계의 소멸을 전제로, **소유-의결-감사 구조를 재편하는 구체적 제도·행정 구상을 제시함으로써**, 마르크스주의에게 이렇게 묻는다.

“당신들은 여전히 현실의 운동을 따라가는 변증법적 사상인가,
아니면 소멸하는 관계에 대중을 끌어두는 반동적 교리인가?”

이 질문에 대한 답은 휴만이 아니라,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신의 실천과 이론으로 증명해야 한다. 휴만은 단지 그 증명의 무대를 마련할 뿐이다.

5. 반동을 피하기 위한 조건: 새로운 계급정치의 언어

마르크스주의가 반동화를 피하려면, 다음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.

1. 노동-자본 관계의 역사적 한시성을 인정할 것

- 이 관계가 형성·확대·위기·해체의 단계를 거치는 역사적 구조임을 전제로 다시 서술해야 한다.

2. 재생산 전선과 자본 접근권의 문제를 계급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것

- 임금, 고용뿐 아니라 지분·배당·데이터·주거·연금이 결합된 재생산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.

3. 소유-의결-감사 구조를 새로운 계급정치의 언어로 삼을 것

- “누가 얼마나 갖느냐”뿐 아니라 “누가 무엇을 결정하고, 누가 책임을 지는가”를 계급정치의 핵심 문제로 삼아야 한다.

4. 휴만과 같은 새로운 구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되, 현실을 외면하는 방패로 삼지 말 것

- 휴만을 비판하더라도, 그 비판은 현실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하고,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.

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한에서,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휴만 이후의 사회를 사유하는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. 반대로 이 조건을 거부하고 과거의 계급 도식에 집착한다면, 마르크스 주의는 스스로를 역사 밖으로 퇴장시키는 반동 이데올로기로 고정하게 될 것이다.

6. 맺으며

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‘노동의 소멸’은 단순한 고용 감소나 직무 전환이 아니라,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본-노동 관계의 중심성이 약화·해체되는 과정을 가리킨다. 임금노동이 더 이상 사회 통합과 재생산의 기본 장치가 될 수 없는 지점에서는, 전통적인 의미의 ‘노동계급’과 ‘자본가 계급’ 역시 그 전제를 잃게 된다. 이때 휴만(Humann) 통합은 자본-노동 관계에 덧붙여지는 보완물이 아니라, 그 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본 관계를 설계하려는 이름이다.

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과제는 자본-노동 관계를 영구적인 범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,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, 어떤 조건에서 변형·해체·소멸되는지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 있다. 만약 자본-노동 관계를 역사적·물질적 관계가 아니라 이념적 출발점으로 고정하고, 오늘의 변화(자동화·데이터·재생산 위기)를 그 틀에 얹지로 끼워 넣는다면, 그런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비판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뒤처진 자기폐쇄적 교리가 될 위험이 있다. 휴만은 이 위험을 경고하면서, “노동 이후의 사회”를 이론이 아니라 소유-의결-감사 구조의 재설계라는 구체적 쟁점으로 끌어내리려 한다.